20일 Market Index
코스피 4869.96 (-267.93)
코스닥 645.68 (-39.13)
금리(국고채 3년) 3.642 (-0.074)
환율(원-달러) 1336.2 (+6.2)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하나금융그룹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우세
수도권 집값 상승·가계부채 변수

금통위, 오는 26일 기준금리 결정
지난달 은행 주담대 순증액 3.3조
미승인 집단대출 실행 늘어난 영향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도권 집값 오름세와 가계부채 부담도 금리 판단의 변수로 남아 있다. 10월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이미 승인된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실행이 늘면서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폭은 다시 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22일 7·8월 두 차례 인상의 파급 효과와 대외 불확실성을 더 살피겠다며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당시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실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 8월 연 4.66%에서 9월 4.88%로 올랐다.

은행권 주담대 순증액도 9월 2조9000억원에서 10월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은행 자체 일반 주담대 순증액은 1조6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집단대출 순증액은 7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국토교통부의 신고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6월 약 3만건에서 9월 약 1만8000건으로 줄었다. 거래가 줄어도 분양 중도금과 정비사업 이주비는 공사와 이주 일정에 맞춰 나간다. 금융당국은 10월 주담대 증가폭이 커진 배경으로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의 실행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철도노조, 오늘부터 쟁의행위 예고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3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뉴시스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2026 입주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2026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티니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6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전국 입주아파트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건축가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SK에코플랜트 '드파인 광안' 아파트. '그랜드 힐 가든' 수경시설과 조형물. /성채리 기자

◆ 심 사 방 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2월 1일 ◆ 시 상 식 : 12월17일

美 AI 쇼크… '블랙먼데이' 몰고 오나

미국·유럽·일본 등 글로벌 긴축
빚투 개미들, 반대매매 위험 커져
'환율하락'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개인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과 미국·유럽·일본 등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여파로 23일 열릴 국내 주식시장에 '검은 월요일'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서다. 특히 빚을 내 투자한 '빚투(빚내서 투자)' 개미에게는 단순한 손실 확대를 넘어 '반대매매'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미수거래(매수대금 일부를 나중에 내는 거래) 반대매매 금액은 2343억원에 달한다. 전달 5414억원의 43.28%에 달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반대매매에 따른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주가 하락세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4면〉

시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투매하는 '항복 매도'와 반대매매가 쏟아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주 뉴욕 주식시장에서 AI 열풍을 주도하던 AI·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폭락하며 공포 심리가 번져 있는 데다, 1336.2원(20일 기준)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자금 이탈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화가 비싸지면 같은 원화로 더 많은 달러를 손에 쥔다. 코스피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42.55% 떨어졌지만, 달러로 따지면 낙폭은 33.46%로 떨어진다. 고수익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쏠리는 상황도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단기 '빚투' 지표인 위탁매매 미수금도 증가세다. 19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9700억원으로, 지난달 말(8723억원)보다 1000억원 넘게 늘었다. 같은기간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의 비율은 0.4%에서 1.2%로 뛰었다.

주요 증권 커뮤니티에선 억대 손실을 호소하는 글부터 추가 폭락을 걱정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투자자는 "1억원을 날렸다. 내 돈 내놔 외국인들아"라고 적었고, 삼성전자에 투자한 한 개인은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 망하는 건 나"라며 자조했다. "노후생활비에 보태려고 샀는데 17% 손실이 났다. 더 사는 것도 무섭다"는 호소도 나왔다.

증시를 떠받치는 대기 매수세도 약화하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19일 81조5669억원으로, 전달 말 90조2351억원 보다 8조6681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6월 최고치(139조6948억원)와 비교하면 약 58조원 줄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6조833억원까지 줄었다. 지난달 말 29조644원대에서 15거래일 만에 약 3조원이 줄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커버스토리

임금·복지 격차… 퇴직자 60% 1년 못채워

中企 떠나는 청년들

중기근로자 중 39세 이하 28.9%
대기업 41.8% 보다 12.9%p 낮아
퇴직사유 41.4% '낮은임금 수준'
중기부 "임금격차 완화 등 지원 필요"

전북 익산에 있는 한 기계 관련 중소기업은 오랜만에 30대 직원을 맞았다. 채용 공고를 내고 주변에 수소문도 해보고 인근 대학을 통해 소개도 받는 등 사람을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봤다. 〈관련기사 3면〉

그런데 이 청년은 1년도 안돼 좀더 돈을 많이 주는 주변의 또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또다시 사람을 구하기위해 같은 일을 반복해야한다. 사람 찾아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됐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떠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더욱 빠르게 늙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해 2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30~39세 비중은 2015년 23.7%에서 2025년에는 19.9%로 3.8%p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300인 이상)이 33.8→32.3%로 1.5%p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39세 이하 청년 비중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눈에 띄게 낮다.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청년 비중(남성)은 중소기업이 28.9%로 대기업(41.8%)보다 12.9%p 낮다. 여성은 중소기업 30.6%, 대기업 57.7%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豚眼見豚…순방 외교 대통령 주요 업무" /사진 뉴시스
▲이 대통령 "시험지 촬영·전송 차단 추진…식별 표식으로 출처 확인 방안 검토"
▲조국혁신당, '연내 조희대 탄핵안 처리' 與에 "30일까지 소추안 발의 완료해야"
▲조국 "당명 개정 제안…당원·국민 의견 수렴할 것"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 지켰다"…YS 서거 11주기 추모식
▲전교조 "최교진, 수능 부정행위 대비 부족…AI 대응할 장관 와야"